

종편반대, 불매·유권자운동으로 진화하다

조중동 종편 사업자들이 사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안, 종편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중동 종편 반대운동 또한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선 지난 8일에는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이하 무한행동)'이 "위법·특혜 조중동 방송 1차 불매운동 선포식"을 열고 조중동 종편에 투자계획을 밝힌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동아제약·녹십자·에이스침대·한샘·일동제약·삼양사·동광제약 등 8개 업체를 선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 것을 권했다. 무한행동은 앞으로 조중동 방송 투자기업·제품목록, 참여방법 등이 담긴 유인물과 스티커를 배포하고, 선전전 및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불매운동 소비자 행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중동 방송을 만든 정당과 인물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을 권하면서 불매운동을 낙선운동과도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 참여기업 불매운동 선언단제'들과 공동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조중



동 방송은 반칙"이라며 "해당기업(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의 정의로운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중동 방송은 반드시 퇴출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선포식에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양재일 대표 등 여러 정치·시민·언론단체가 참가해서 조중동 방송 반대에 뜻을 같이 했다.

그런가하면 정당을 포함해 44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조중동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들 445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힘으로 조중동 방송을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수구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미디어산업 전반을 파국으로 몰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개치려는 상황에서 우리

게는 '조중동방송' 저지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우리의 '조중동방송' 저지 운동은 '조중동방송'이 취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은 "20여년 전에는 '보도지침'이라는 언론통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대로 조중동 방송이 실시되면 돈있고 힘있는 사람, 관료들의 세상

이 더 가까워질 것이기에 조중동 방송을 저지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중동 종편이 망할 것이라는 대책없는 낙관론, 종편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소셜네트워크로 종편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 등 반대진영들조차 위험한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수신료, 3년 4개월만에 다시 국회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500원인 KBS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수신료 인상안의 국회상정은 2007년 11월, 400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다 폐기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문방위의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 민주당 김재운 의원은 이번 수신료 국회상정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 이어 국회 문방위 소속 석영환 전문위원이 'KBS가 수신료 인상근거로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번 수신료 인상안의 여야합의 역시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회에 상정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게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말로는 MB정권의 방송장악을 비난하면서 왜 'MB정권의 나팔수'를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일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느냐"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의 '공범'이 된다면 국민들은 또 한번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만평

제53화

2012년 12월 31일의 고뇌

김성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club.kobeta.com
- 방송과기술 magazine.kobeta.com
- 방송기술저널 journal.kobeta.com
- 모바일 방송기술저널 m.kobeta.com